

李 집권 두 달 만의 '조·청 전성시대'

태평로

배성규
정치 에디터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 전 측근들에게 물었다고 한다. "조국 전 대표를 왜 사면해 줘야 합니까?" 명분이 없다는 뜻이었다. 연말이나 내년으로 미루자는 의견이 적잖았다. 하지만 조국학신당이 대선 협력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여권 내부와 지지층의 압박도 커졌다. 현실론에 밀렸다.

원칙을 어긴 대가는 컸다.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 조 전 대표는 출소하자마자 내년 선거 출마를 공언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말하면서도 합당엔 선을 그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책임은 "n분의 1"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지역 순회에 나섰다. 독자 세력화 의도가 명확했다. 대통령 실은 당혹감을 넘어 배신감이 커졌다. 민주당이 뒤늦게 "개선장군 행세 말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조국이 움직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쟁이 불가피하다. 호남 등 여권 기반을 잠식할 것이다. '호랑이를 풀어준 격'이다.

대통령의 더 큰 고민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다. 정 대표는 방송법과 노란봉 투법, 상법, 검찰·법원 개혁안 등을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다. 그는 대통령에

게 "내가 배드캡이 돼 개혁의 선봉을 맡겠다. 한두 달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궂은일은 자신이 할 테니 대통령은 믿고 따라와 달라는 뜻이었다.

이 대통령은 큰 방향에 공감했지만 방법론이 달랐다. 실용주의 노선에도 어긋났다. 덧나지 않게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참모들이 이런 뜻을 전했지만 정 대표는 듣지 않았다. 대통령이 직접 정 대표를 만났다. 그런데 오히려 '추석 전 법안 처리'로 결론 났다. 대통령의 '실용과 통합' 대신 정 대표의 강경 노선이 관철된 모양새였

했다. 두 사람은 이미 여권의 차기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역대 정권에서 이 인자들이 이처럼 일찌 전면에 나선 적은 없었다.

지금 이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는 트럼프(發) 통상·안보 위기와 구조적 저성장의 핵심을 해쳐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유연한 실용주의 정책을 통해 기업과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 통합과 협치로 국민 지지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여당은 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법안들을 연이어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 힘은 '국민의 적'이라고 비하하고 외면했다.

정청래식 폭주를 방지하면 실용도 협치도 힘들다. 중도·보수층은 이탈하고 대통령 리더십도 흔들린다. 조국을 놔두면 범여권이 분열할 것이다. 두 사람을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 하지만 정 대표의 관심은 딴 곳에 있는 듯하다. 머리에 금관을 쓴 사진을 올리고, 노란봉 투법 처리 후 "역사적으로 큰일 했다"고 자화자찬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싸우면 정권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노무현·정동영, 박근혜·김무성, 윤석열·이준석·한동훈이 그랬다.

조 전 대표는 '포스트 이재명'을 바라보고 있다. 현 정권에 협력자인 동시에 지지 정치를 하는 사이 대통령의 국정 주도력은 약해졌다. 실용 노선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조국의 재등장은 지지율을 깎고 원심력을 키웠다. 대통령 실 핵심 인사는 "대야 관계보다 '조·청(曹清) 관계'가 더 골치 아프다"고

이해명 대통령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3일 이사의 충실험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53일 만에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더 선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전날 노란봉 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이어 이를 연속 강행 처리된다.

노란봉 투법과 1·2차 상법 개정안은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기업들의 경영권에 쓰나미급 변화를 몰고올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 투법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사 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 노사 관계의 균형축이 무너지고, 주도권이 노조로 넘어갈 수 있다.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를 분리 선출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 주주보다 외국계 펀드나 소액 주주들의 영향력이 훨씬 강해진다. 게다가 복수의 이사 선임 시 투표권을 한 명에게 몰아주는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노리는 세력이 단기적 시

민주당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3일 이사의 충실험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53일 만에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더 선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전날 노란봉 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이어 이를 연속 강행 처리된다.

노란봉 투법과 1·2차 상법 개정안은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기업들의 경영권에 쓰나미급 변화를 몰고올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 투법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사 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 노사 관계의 균형축이 무너지고, 주도권이 노조로 넘어갈 수 있다.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를 분리 선출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 주주보다 외국계 펀드나 소액 주주들의 영향력이 훨씬 강해진다. 게다가 복수의 이사 선임 시 투표권을 한 명에게 몰아주는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노리는 세력이 단기적 시

민주당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3일 이사의 충실험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53일 만에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더 선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전날 노란봉 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이어 이를 연속 강행 처리된다.

노란봉 투법과 1·2차 상법 개정안은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기업들의 경영권에 쓰나미급 변화를 몰고올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 투법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사 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 노사 관계의 균형축이 무너지고, 주도권이 노조로 넘어갈 수 있다.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를 분리 선출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 주주보다 외국계 펀드나 소액 주주들의 영향력이 훨씬 강해진다. 게다가 복수의 이사 선임 시 투표권을 한 명에게 몰아주는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노리는 세력이 단기적 시

민주당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3일 이사의 충실험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53일 만에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더 선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전날 노란봉 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이어 이를 연속 강행 처리된다.

노란봉 투법과 1·2차 상법 개정안은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기업들의 경영권에 쓰나미급 변화를 몰고올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 투법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사 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터꿨다. 노사 관계의 균형축이 무너지고, 주도권이 노조로 넘어갈 수 있다.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를 분리 선출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 주주보다 외국계 펀드나 소액 주주들의 영향력이 훨씬 강해진다. 게다가 복수의 이사 선임 시 투표권을 한 명에게 몰아주는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노리는 세력이 단기적 시

민주당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3일 이사의 충실험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53일 만에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더 선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전날 노란봉 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이어 이를 연속 강행 처리된다.

노란봉 투법과 1·2차 상법 개정안은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기업들의 경영권에 쓰나미급 변화를 몰고올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 투법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사 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터꿨다. 노사 관계의 균형축이 무너지고, 주도권이 노조로 넘어갈 수 있다.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를 분리 선출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 주주보다 외국계 펀드나 소액 주주들의 영향력이 훨씬 강해진다. 게다가 복수의 이사 선임 시 투표권을 한 명에게 몰아주는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노리는 세력이 단기적 시

민주당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3일 이사의 충실험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53일 만에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더 선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전날 노란봉 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이어 이를 연속 강행 처리된다.

노란봉 투법과 1·2차 상법 개정안은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기업들의 경영권에 쓰나미급 변화를 몰고올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 투법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사 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터꿨다. 노사 관계의 균형축이 무너지고, 주도권이 노조로 넘어갈 수 있다.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를 분리 선출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 주주보다 외국계 펀드나 소액 주주들의 영향력이 훨씬 강해진다. 게다가 복수의 이사 선임 시 투표권을 한 명에게 몰아주는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노리는 세력이 단기적 시

민주당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3일 이사의 충실험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53일 만에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더 선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전날 노란봉 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이어 이를 연속 강행 처리된다.

노란봉 투법과 1·2차 상법 개정안은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기업들의 경영권에 쓰나미급 변화를 몰고올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 투법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사 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터꿨다. 노사 관계의 균형축이 무너지고, 주도권이 노조로 넘어갈 수 있다.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를 분리 선출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 주주보다 외국계 펀드나 소액 주주들의 영향력이 훨씬 강해진다. 게다가 복수의 이사 선임 시 투표권을 한 명에게 몰아주는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노리는 세력이 단기적 시

민주당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3일 이사의 충실험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53일 만에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더 선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전날 노란봉 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이어 이를 연속 강행 처리된다.

노란봉 투법과 1·2차 상법 개정안은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기업들의 경영권에 쓰나미급 변화를 몰고올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 투법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사 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터꿨다. 노사 관계의 균형축이 무너지고, 주도권이 노조로 넘어갈 수 있다.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를 분리 선출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 주주보다 외국계 펀드나 소액 주주들의 영향력이 훨씬 강해진다. 게다가 복수의 이사 선임 시 투표권을 한 명에게 몰아주는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노리는 세력이 단기적 시

민주당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3일 이사의 충실험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53일 만에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더 선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전날 노란봉 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이어 이를 연속 강행 처리된다.

노란봉 투법과 1·2차 상법 개정안은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기업들의 경영권에 쓰나미급 변화를 몰고올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 투법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사 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터꿨다. 노사 관계의 균형축이 무너지고, 주도권이 노조로 넘어갈 수 있다.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를 분리 선출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 주주보다 외국계 펀드나 소액 주주들의 영향력이 훨씬 강해진다. 게다가 복수의 이사 선임 시 투표권을 한 명에게 몰아주는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노리는 세력이 단기적 시

민주당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3일 이사의 충실험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53일 만에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더 선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전날 노란봉 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이어 이를 연속 강행 처리된다.

노란봉 투법과 1·2차 상법 개정안은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기업들의 경영권에 쓰나미급 변화를 몰고올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 투법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사 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터꿨다. 노사 관계의 균형축이 무너지고, 주도권이 노조로 넘어갈 수 있다.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를 분리 선출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 주주보다 외국계 펀드나 소액 주주들의 영향력이 훨씬 강해진다. 게다가 복수의 이사 선임 시 투표권을 한 명에게 몰아주는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노리는 세력이 단기적 시

민주당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3일 이사의 충실험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53일 만에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더 선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전날 노란봉 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이어 이를 연속 강행 처리된다.

노란봉 투법과 1·2차 상법 개정안은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기업들의 경영권에 쓰나미급 변화를 몰고올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 투법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사 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터꿨다. 노사 관계의 균형축이 무너지고, 주도권이 노조로 넘어갈 수 있다.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를 분리 선출할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 주주보다 외국계 펀드나 소액 주주들의 영향력이 훨씬 강해진다. 게다가 복수의 이사 선임 시 투표권을 한 명에게 몰아주는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노리는 세력이 단기적 시